

〈청년들, 청년배당에 답하다!〉 토론회를 마치고

/스밀라 기본소득청 '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들어가며

지난 20일은 성남시 청년배당의 4분기 지급일이었다. 올해 계획된 네 번의 배당 지급이 모두 이루어졌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이 그 대상자였다.

두루 알다시피 성남시 청년배당은 분기당 12만5천원이지만,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산 심사나 노동 여부 등의 조건 없이 나이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부분적 기본소득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애초 계획보다 금액이 절반이 적어졌다는 점과 현금이 아니라 사용처가 제한된 상품권이 지급된다는

점 때문에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들도 많았다.

청년배당의 실행과 더불어 기본소득청 '소'년네트워크는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성남시 청년배당 모니터링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실제로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과 심층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해 3분기 지급일(7월 20일)에 성남시 동사무소에서 직접 수령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에 개최한 토론회 <청년들, 청년배당에 답하다!>에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가 포함된 토론회 자료는 기본소득청 '소'년네트워크 홈페이지의 모니터링과 토론회를 알리는 페이지(<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act/youth-income-monitoring>) 하단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청년들은 청년배당을 어디에, 어떻게 썼을까

설문에 참여한 청년배당 대상자는 총 498명으로, 이 중에 처음 배당을 받는 대상자는 131명, 2회 이상 받은 대상자는 376명이었다. (청년배당은 만 24세에게 지급되기에 생일에 따라 한 번만 받을 수도 네 번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성남시라는 지역의 특성상 응답자의 91.9%가 부모 등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고, 1인 가구 비율은 3.2%뿐이었다. 주거 형태도 자가 52.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세(27.7%), 월세(13.8%) 순이었다.

만 24세의 대다수가 대학생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응답자 중 학생(42.3%)보다 비학생(57.2%)의 수가 약간 더 많았다. 응답자의 40.8%는 소득이 없다고 답했으며, 아르바이트가 21.3%, 정규직이 20.7%, 인턴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11%로 나타나, 많은 청년이 미취업 상태이거나 불안정일자리로 여겨지는 아르바이트/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배당이 처음 실시된다고 했을 때 인터넷을 달군 것은 소위 ‘깡’에 대한 우려였다. 상품권을 팔아서 그 현금을 유흥에 사용할 거란 억측과 결국 성남시 밖에서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될 거란 반대 여론도 있었다. 이러한 우려와 다르게 실제로 상품권 판매를 시도하거나 ‘깡’을 한 청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주 소비 지역이 성남시라고 응답한 청년이 83%에 달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소비 지역에 대한 예상도 빗나갔다.

2회 혹은 3회째 청년배당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년 중 84.2%는 청년배당으로 지급된 성남사랑상품권을 1회 이상 사용했다고 응답했고, 그중 39.4%는 마트나 가게에서 이용했다고 한다. 이는 실제 사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찌면 제한된 사용처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청년배당이 시작된 이후로 상품권 가맹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2,555개의 가맹점 중 식당은 838개, 식료품 관련 도소매업은 672개에 달한다. 실제로 상품권 사용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37%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다”, 29.4%는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찾기 힘들었다”라고 답했다. 사전에 진행한 심층 그룹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청년들이 주로 소비하는 장소는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인데 그런 곳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일 토론회 패널로 참여했던 안학수 씨(청년배당 대상 청년) 또한 가맹점인 동네 서점은 규모가 작은 곳이라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없었다는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청년배당 정책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지역 점포를 가맹점으로 삼은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정책이 계속 이어지려면 청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디에 상품권을 쓰고 싶어 할까?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항목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청년들은 1순위로 교통비, 2순위로 통신비, 3순위로 (어학, 자격증 등) 학원 교육비를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만 24세 청년들이 교통비와 통신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아마 위성도시인 성남시의 청년들은 주로 서울로 등교하거나 출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교통비에 쓰고 있을 것이다.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은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품목들이지만, 이것들은 현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이러한 항목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청년정책

청년배당 모니터링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청년들이 ‘청년배당을 받는 경험을 통해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가’였다. 그간 정부가 진행해 온 청년실업 정책들은 많았지만 그 실효성을 체감한 청년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청년 당사자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청년배당을 제외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본 적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3%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일 토론자로 참여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는 “한국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복지 혜택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존 청년정책들과 다르게 청년배당은 청년들에게 직접 주어졌고, 심층 그룹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청년배당을 통해 “국가가 나를 신경 쓴다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설문 조사에서 “청년배당을 통해 성남시가 청년의 삶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질문에 약 95%가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더불어 “청년배당을 통해 성남시(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94%가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또 “만일 귀하가 청년배당 대상 연령을 지나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청년배당 정책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는 응

답이 42.6%,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1.6%에 달했다. 94.2%가 응답자 본인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정책이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승윤 교수는 이에 대해 “청년들이 개인적 소득안정을 위해서라기보다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과 사회 연대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꿈꿔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이재명 시장이 여러 차례 밝혔듯,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의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녹색전환연구소가 처음에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도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탐구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청년배당 수령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38.2%가 안다고 대답했고 그중에 72.1%가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에 근거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답했다. 40%에 달하는 응답률이 꽤 높은 수치임을 감안하면, 전후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이 정책 인지도를 높이는 데 상호 보완적 역할을 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기본소득 정책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9.9%,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1.8%로 81.7%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상당수의 청년이 기본소

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낼 용의가 있을까? 놀랍게도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하는 응답자(407명)에 한해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 60.7%의 응답자(247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응답이 대중 일반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청년배당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을 미리 경험해 봤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응답자들은 기본소득 도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원 마련”(34.5%)과 “국회 합의”(25.1%)를 꼽았는데, 기타 답변에서는 “세금 사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는 청년들이 정부의 세금 운용을 불신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하겠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설문 조사 마지막에 “청년으로서 생활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서술식으로 물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었지만 “취업이 힘들다”, “낮은 임금”,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모두 해야 하는 점”, “불투명한 미래” 등 청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 주는 답변들이 눈에 띄었고, 이를 보며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배당 수령자들에게 “청년배당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를 물었을 때 40.3%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55%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청년배당이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준 듯하다. 하지만 청년배당 또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앞서 말했듯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리고, 지급 금액도 당초 예정했던 연 100만원으로 올려야 팍팍한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듯 보인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남시는 연령대 확대나 지급 금액 인상 없이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액수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심층 그룹 인터뷰에서 청년배당 대상자들이 일반적으로 던진 질문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청년에게 주어야 하는가?”처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었다.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 해 나갈 기본소득운동에도 여러 시사점을 남겨 준다.

“잠재력이 아니라 잠과 재력을 따로 주세요”

토론자로 참여한 청년배당 대상자 안학수 씨는 현재 취업 준비생이다. 그는 청년기를 “생존의 의무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무가 동시에 주어져 사실 어느 쪽도 제대로 이루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정의했다. 청년들은 나이로는 성인에 속하지만 ‘취업’이라는 통과의를 아직 지나지 못했으므로 ‘반 성인’의 상태라고 말했다. 안학수 씨를 비롯한 많은 청년은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는 청년배당과 같은 지원이 개인의 삶에서 선택권을 늘려 주고, 심리적인 여유를 증대시켜 주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국가장학금, 취업 교육 지원 등의 청년정책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정책을 찾고 신청해서 이용하는 과정이 청년들에게는 이미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또 안학수 씨는 청년배당이 ‘배당’의 형태를 띠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청년배당이 ‘수당’이나 ‘자선’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 말했다. 지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위계가 생겨선 안 된다고 말하며, 청년이 배당의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은 청년들 또한 사회의 당당한 성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라 의미 있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증언하고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크게 받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당일 토론회의 또 다른 토론자였던 오늘공작소의 신지예 씨는 서울시 청년수당 심사위원으로 추천되어 청년수당을 신청한 약 400명의 청년들의 활동 계획서를 검토했었다. 지원자의 반절 이상은 지원서에 생활고와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적었고, 대부분의 지원서에는 열심히 해 보겠다, 잘 해보겠다, 감사하다, 약속하겠다 등의 다

점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신지예 씨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청년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신청 과정에서부터 배제되는 청년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신지예 씨는 “사업계획서나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할 줄 아는 능력 또한 부모의 경제적 후원,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어떤 청년들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자신의 상황을 글로 표현하기에 미숙하다. 그런 청년들의 신청서는 언뜻 보면 성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언어를 갖추지 못한, 문화자본이 굉장히 미미한 청년일 확률이 높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각종 서류와 활동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수당금을 사용한 후에는 영수증과 보고서를 내야 한다. 시간이란 자원을 아끼고 그만큼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현금 지급의 목적임을 기억했을 때 불필요한 증명과 증빙들은 없애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신지예 씨는 수당 1차 지급이 이루어진 후 대상 청년 5명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질문 중 하나가 기본소득 찬반에 대한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5명 중 4명이 기본소득을 반대했다. 이유는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는 청년수당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취약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추측했다.

설문 조사 결과 발표가 끝나고 이승윤 교수는 한국의 청년노동 시장을 배경으로 시행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효

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획기적인 ‘기본소득 실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청년들이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노동자로 머물며, 결국은 잠재실업, 장기실업,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고학력’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인데, 한 사회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청년 집단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청년문제로 국한되어 이야기할 것이 아니며 한국 사회 전체의 복지, 불평등, 경제성장, 그리고 안녕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주목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속에서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및 양육수당과 같은 수당과 달리 청년배당, 또는 청년 ‘기본소득’은 ‘근로를 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본소득 개념에 가장 근접한 수당”이라고 덧붙였다. 또 설문 조사 결과에 덧붙여 “청년기본소득이 1) 즉각적인 소득불안정 완화 효과 뿐 아니라 2) 민주주의 확대 및 3) 한국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판단한다.”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은 빈곤선 아래의 계층과 그 위 계층 간의 연대의식을 낮춰, 총량적 재원이 더 적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복지를 위한 추가 지출에 낮은 지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설문 조사에서 청년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높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오히려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지지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내다봤다.

나가며

이번 성남시 청년배당 모니터링은 기본소득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심층 그룹 인터뷰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솔직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청년배당에 대한 찬반 이유를 들려주었는데, 그를 통해 향후 기본소득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연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또 직접 동사무소에 나가 설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행정비용’에 대해 체감할 수 있었다. 설문을 받는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자신이 복지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시민들을 상대하고, 또 그중 대부분을 설득해 되돌려 보내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와 달리 청년배당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받아갈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정책이었고 실제로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덜해 보였다. 실제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6천여 명의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음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청년배당은 분명히 청년들에게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경험을 선사했다. 사회가 나를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은 시민들

의 사회 참여를 이끌고, 이는 입법과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낸다. 청년배당을 통한 보편적 복지의 경험은 복지제도 확장에 관심을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의 정책을 지켜본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실험을 이끌어 내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조교**